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3241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2025아3491 위헌제청신청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송○○

피 고 ○○시 ○○구청장

위헌법률심판제청인 원고

변 론 종 결 2025. 6. 19.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6.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86,394,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¹⁾ 전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12. 2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주식 중 255,000주(발행주식 총수 대비 5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했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회사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23. 6. 9.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등록된 매매용 중고자동차 381대(이하 '이 사건 중고자동차'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자산 장부가액 9,518,439,575원 중 원고 주식비율(5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5,555,330원, 농어촌특별세 4,200,080원 합계 139,755,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8. 22.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14. 이를 기각했다.

1) 원고는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전문에 대해서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해당 조항의 개정 연혁에 따라 심판대상을 위와 같이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이 사건 회사 소속 매매사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명의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함을 전제로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이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회사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과 달리 그 과점주주에게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와 회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점주주의 직업수행 자유 또는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1) 이 사건 회사와 소속 매매사원이 작성한 중고자동차 매매사원 위촉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위촉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 소속 매매사원은 중고



자동차 매매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대금 지급과 중고자동차 인수 및 인도, 상품용 차량 이전등록, 서류의 발급 및 교부 등에 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고 수행하고 (제3조 제2항), ②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중고자동차의 판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제6조 제1항), ③ 이 사건 회사에 매매행위 지원에 대한 사용료 및 제반 운영비 (월 35만 원)를 납부하고, 중고자동차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등록할 때 '매입비(15만 원)'와 이 사건 회사가 중고자동차를 관리하고 제반 업무를 진행한 데 대한 몫으로 판매가 성사되었을 때 매도비(44만 원)를 지급하는 것(제7조) 외에는 판매대금이 그의 몫 이 된다. 이 사건 회사 소속 매매사원인 증인 C는, 자신의 계산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지시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에게 매입비와 매도비를 지급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 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당사자는 소속 매매사원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면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3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판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판매해 왔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원들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 영업을 위탁받아 매매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나) 위촉계약서 중 ① 이 사건 회사의 매매사원에 대한 위탁 범위는 '중고자동차



의 매매영업'으로 한정되었고(제1조), ② 매매사원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그 대금을 일단 이 사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고, 매매사원에 대한 정산을 '이익금 배분'이라고 칭하고 있으며(제5조), ③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이고(제2조 제8호), 매매사원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후 판매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처분·유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점(제9조 제6항) 등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매매사원은 판매가 성사되었을 때 이익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을 뿐 그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관리·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촉계약서에서 판매용 중고자동차를 조달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매매사원을 '실차주'라고 지칭하고 있기는 하나(제2조 제2호), 이는 매매사원에게 중고자동차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사된 판매를 알선한 사원(이른바 '알선판매사원', 제2조 제4호)이 따로 있을 경우 서로를 구별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실차주'가 직접 판매했다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차주이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지만, '알선판매사원'을 통해 판매했다면 그의 몫('알선판매이익금')을 떼어 주어야 한다].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이 사건 회사와 소속 매매사원 간의 구조는 운수업체와 지입차주의 구조와 유사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이 지입차주를 취득자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취득자도 소속 매매사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개별 근거법규가 없는 이상 다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취득자를 실제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법인과 그 과점주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법인과 그 과점주주를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회사 과점주주에게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불충분한 입법을 하여(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자는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을 고려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넓은 재량이 있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위헌으로 단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8헌바12 결정 참조). ①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목적은 자동차매매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여 중고자동차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과점주주는 직접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그가 회사의 중고자동차를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된 데 따른 세금(간주취득세)을 면제해줄지는 중고자동차 매매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③ 취득세와 간주취득세는 과세근거규정이 다르고 과세표준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도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6897 판결 참



조)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매매업자인 회사 과점주주에 대해서 중고자동차 간주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또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 제15조가 보호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는바(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마1144 결정 참조),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회사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1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의 취지를 기업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를 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므로 과점주주가 곧 기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주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또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²⁾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결정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도 같은 이유로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 목적의 정당성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다. 해당 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 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 방법의 적절성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고, 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부과대상을 필요한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 과세표준을 과점주주의 취득주식 소유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해당 조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에 있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법익의 균형성

해당 조항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이고, 그 제한 정도가 해당 조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 등 공익과 비교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원고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박○○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③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세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끝.